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하는 길에 내걸린 수백개의 만장을 배경으로 이른 아침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盧前대통령 서거

노 전 대통령 서거 5일째인 27일까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이 80만 명을 넘어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자정까지 봉하마을을 방문한 추모객 수가 7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장의위원회는 26일 하루 22만여 명이 분향한데 이어 27일에도 새벽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저녁 무렵까지는 80만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정부 분향소에 도 사회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27일 경남 김해시 진영 봉하마을을 진입로 양쪽 길을 따라 500개의 만장이 내걸렸다.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원들이 인터넷 다음 ‘아고리’에 오른 노 전 대통령 추모글을 적은 만장은 봉하마을 입구에서 빈소 인근까지 2km 구간에 설치됐다.

만장에는 ‘돌아와 주세요 노통장님. 꽃잎처럼 흘려 흘려 그대 잘 가리 물어도 물어도 보고 싶다’며 애도와 그리움을 나타내거나 ‘우리 갈길 멀고 험도 끝내 이기리라’라는 각오를 다지는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다.

○…오전에는 제주 4·3 피해자유족회 회장 이중홍(63·제주시 연동)씨가 입원 10여 명

“노짱 보고 싶어요” 500개 만장 추모 글 가득

권여사 “자원봉사자·조문객에 감사”

제주 4·3 피해자유족 “가슴에 묻겠다”

서울역사박물관 재계총수 조문 행렬

행렬은 다소 준듯했으나 출근하려는 직장인들이 오전 6시부터 대기 찾으면서 분향을 기다리는 추모객들이 봉하마을 입구까지 300여m 정도 길게 늘어섰다.

장의위원회는 추모객의 분향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자 어제까지 한꺼번에 분향하는 추모객 수를 이날부터 전보다 배가 많은 100여명으로 늘렸지만 대기행렬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오전에는 제주 4·3 피해자유족회 회장 이중홍(63·제주시 연동)씨가 입원 10여 명

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영정에 헌화하고 애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제임 때인 2003년 정부의 공식보고서인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확정하고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데 이어 2006년 제58주기 4·3 위령제에 직접 참석했는데 이 회장은 그때 고인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제주도민의 은인이 노 전 대통령을 가슴에 물고 살아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양숙 여사가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을의 분향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전국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공동장례위원회는 27일 분향소 인근에 설치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권 여사가 분향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분향에 참여하는데 대해 가슴 속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장례 일정이 엄숙하고 당당하고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분향소를 찾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담을 유골함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골함은 자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보훈처에서 유골함을 준

비한 건 고맙지만 장례위촉과 협의없이 공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화장해 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높이와 지름이 각 21cm 가량인 흰색 도자기 형태의 유골함을 에우자원에서 마련했으며 유족들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정부

분향소에 오전에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오전 7시40분 분향소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등 계약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삼성그룹 사장단은 회사 버스 편으로 오전 10시50분께 현장에 도착,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등 30여명이 단체 분향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추모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시민추모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노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를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고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면서 국화꽃 수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남화훼농협동조합과 부산화훼공장 등 전국 화훼물량의 절반을 거래하는 부산경남지역 3개 화훼경매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인 지난 25일 국화거래량은 4만여단(1단은 20송이)이 거래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전인 22일 거래량인 3만여단보다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화훼 경매사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에 분향소가 늘면서 현화 및 분향소 설치에 국화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_연합뉴스

檢, 쌀 직불금 수사

부당수령 공직자 1만9천여명 대상

전남 ‘희망근로’ 넘쳐난다

1만4천여명 지원, 4천명 초과… 월 83만원씩 지급

발하면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희·김학용 의원을 소환해 쌀직불금을 편법 수령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당시 “남편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자료를 폐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2005~2008년 1만9천242명이, 자진신고 공직자 가운데서는 2천 452명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6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차상위 계층 고용지원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전남지역 지원자가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자 모집에 22개 시·군에서 총 1만4천168명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모집 예정 인원 1만188명보다 약 4천여명이 많은 것으로 목포와 여수·순천·나주 등 4개 시 지역은 신청자가 모두 1천명을 넘었다.

이들 4개 시 중 여수시 신청자가 1천5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목포시로 신청자가 1천501명에 달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근로와 연계

또 군 지역에서는 영암군이 1천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광양시로 512명이었다.

전남도는 신청자가 모집 예정 인원보다 많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자 대부분이 ‘희망근로’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이를 신청자를 상대로 희망근로 적격자 여부를 가린 뒤 다음달 1일부터 696억원 규모의 도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근로와 연계

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임금은 1일 3만3천원, 월 83만원 정도이며, 주 5일 근무에 주1회 유급 휴가와 월차 수당도 지급되고 임금 일부를 전통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희망근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공공근로로 이뤄지는 단순 취로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전남도가 정한 선도사업 7개와 시·군 권장사업 25개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설마 촛불로 비화 되진 않겠지?!

전남 해안선 ‘걸어서 생태탐방’

1천200km 걷기 전용 길 만든다

전남지역 해안선 1천200km에 걸쳐 생태탐방 해안 걷기 전용길이 조성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문화, 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남도 바닷길 삼천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남도 바닷길 삼천리’는 영광에서 광양까지 전남지역 해안선 1천200km를 따라 만들어지며 모든 구간에서 바다를 보고 걸을 수 있는 ‘걷기 전용길’로 조성된다.

도보 길은 지역별 60개 테마 코스

로 구간당 20km 내외로 개설되며, 탐방로 각 코스에는 지역별 특색이 있는 땅길 길, 암전 길, 영광, 굴비길, 순천만 갈대길, 갯벌 길 등의 이름이 붙여진다. 도보 길은 해변을 따라 나 있

는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콘크리트 도로는 피해 가급적 흙길로 우회해 친환경적인 트레킹 코스로 개발된다. 또 자동차 위주로 꾀 있는 해안도로 인근에는 걷기 전용길을 따로 만들고 산림 등으로 막혀 있는 구간은 잡목만 제거하는 수준의 오솔길을 만들어 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길 이용자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테마코스 주요 구간에 민박과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을 연결하고, 소공원 등 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안길 1천200km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정부가 주진만·갈대길·갯벌 길 등의 이름이 붙여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 하세요

좌측통행 90년만에

19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좌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으로 완전 전환된다.

국토부는 27일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우선 지하철과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되는 일부 구간에서 우측보행이 시범 시행된다.

/연합뉴스

모든 공공기관 감사기구 의무 설치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7일 세종로 중앙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감사체계 제정법’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현재의 자체 감사체계는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 감사 중복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법안에는 자체 감사기구의 의무 설치와 함께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 감사책임자의 임용자격 기준 명시 등이 담길 것이고 손창동 감사원 기획담당관이 소개했다.

아울러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의 표준화, 감사계획 조정과 감사원 감사의 위탁 또는 대행 활성화를 통한 중복 감사 방지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